

物價安定의 背景과 展望

劉 甲 壽

〈國民大學校教授·經博·金融通貨運營委員〉

1. 經濟政策의 方向設定

지난 1983년 우리나라의 物價上昇率은 都賣價 0.8% 下落과 消費者物價 2%의 上昇이란 격적인 物價安定勢를 보여주었다. 80년을 고로 81년 이후 해마다 수그러져 온 物價上昇은 83년에는 負의 記號를 써넣어야 할 경지 이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 經가 安定基調에 뿌리를 내린 것으로 진단할 수 다.

그러나 이러한 物價安定의 달성은 결코 우연 산물이거나 단편적인 정책의 성과가 아니라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第5共和國의 出과 더불어 정부는 經濟政策의 基本方向을 物安定과 生産性의 向上이란 두 개의 큰 가닥으 표방하였다. 인플레이는 貯蓄誘因을 감퇴시키 기업의 品質向上을 저해하여 輸出競爭力을 화시킬 뿐만 아니라 빈번한 임금인상의 분규 소득분배면에서의 弊端으로 하여 百害無益한 으로 판단했던 것이며 그에 따라 重化學部門 複投資의 調整, 企業의 體質改善, 不合理한 格支持政策의 再點檢, 그리고 大企業과 中小業의 均衡의 發展의 圖謀 등을 통해 生産性 上을 유도하는 한편에서 정부는 通貨供給, 換流動 그리고 金利水準 등을 安定政策의 脈絡 맞추어 이끌어 나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本生計費의 安定化를 바탕으로 賃金安定을 위

해 힘을 기울여왔던 것 역시 사실이었다. 이에 더하여 인플레이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輸入自由化의 폭을 늘리고자 힘써왔으며 公正去來制의 도입 등 競爭體制確立을 위해서도 노력을 경주해 왔다. 流通部門의 近代化와 備蓄制의 확대 등 일련의 供給構造의 改善策도 염두에 두어 왔다. 이러한 政策들을 통해서 정부는 輸出을 늘리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며 國際收支를 改善하고자 꾀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第5共和國은 이와 같이 設定한 政策目標의 달성을 위해서 經濟運用方式에서도 官主導目標行政 스타일로부터 市場의 競爭原理에 입각한 民間主導로 의 移行을 표방한 바 있다. 실에 있어 이러한 經濟運用方式 轉換의 標榜은 그간 5개 市中銀行의 民營化, 短資會社 및 相互信用金庫의 新設 許容, 一般銀行의 業務範圍擴大, 公正去來法의 制定, 輸入自由化幅의 擴大, 規制行政의 縮小, 認許可幅의 縮小, 節次의 簡素化와 權限의 下部移讓, 그리고 國民的 合意의 誘導를 위한 經濟教育의 強化 등으로 具體化된 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經濟政策의 體系 속에서 物價安定에 最優先順位를 두어 경제가 운용되어 왔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결과로 하여 지금과 같은 物價의 安定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政策의 結實로서의 物價安定

우리나라의 物價는 다음 <表-1>에 보는 바와 같이 1980년 한해의 上昇率이 42.2%에 이르렀었다. 그러하던 都賣物價가 해마다 上昇幅이 낮아져 1982년의 2.4%에서 지난 1983년에는 「마이너스」 0.8%라는 안정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消費者物價의 上昇率 역시 1980년의 32.2%가 1983년에는 1982년의 4.8%보다 더 줄어든 2%라는 한자리 數字로 集計되고 있는 실정이다.

80년대 근간의 物價安定勢를 <表-2>를 통해 60년대 및 70년대에 대비해 볼 때 참으로 昔之感을 금할 수가 없다. 物價上昇率이 단순히 두자리 數字를 벗어나 한자리 數字로 안정되는 것을 넘어서 1983년을 기준하는 경우 都賣物價의 上昇率이 負의 값을 나타내는 가운데에서도 9.2%의 높은 實質成長率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自負

80年代 우리나라 物價推移

<表-1> (前年末比上昇率 %)

	1980	1981	1982	1983
都賣物價	42.2	11.3	2.4	-0.8
消費者物價	32.2	13.7	4.8	2

우리나라의 物價上昇趨勢

<表-2> (年平均上昇率, %)

	1963-71	1972-79
1. 韓國物價		
全國都賣物價指數	12.3	17.1
全都市消費者物價指數	12.5 ¹⁾	14.1
GNP 디플레이터	16.9	19.6
輸出物價指數	-	9.6
輸入物價指數	-	13.1
2. 主要交易相對國		
都賣物價指數		
美國	2.1	9.5
日本	1.4	7.4
自由中國	1.5	9.9

資料：韓國開發研究院(1980.8)

註：1) 1966-72年間 平均

心을 우리는 갖게 된다. 말하자면 高物價·高成長의 定型을 깨고 低物價·高成長의 새로운 章을 열었다는 記念碑의인 自負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착실한 經濟安定을 바탕으로 높은 經濟成長을 이룩했다는 것을 새삼 奇蹟으로 볼 것은 없다. 理論적으로나 史的인 實證面에서나 그것은 실현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까닭이다. 歷史적으로 볼 때 1790년대의 英國, 1850년대의 美國, 1870년대의 日本, 그리고 1970년대의 우리나라의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一時的으로 인플레이는 유용한 資本動員의 수단인 경우가 있었으며 반대로 1920년대초의 독일의 例에서 보듯 인플레이가 한 社會를 근저로부터 파괴한 경우가 있다. Kindleberger 교수가 「브라질」 經濟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1945년에서 1952년에 이르는 7년간은 民間投資가 주로 通貨增發로 이루어졌던 관제로 物價上昇이 유발된 기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資源의 效率的 配分과 生産性 및 利潤의 增大를 가져왔던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브라질」의 경우에도 1952년 이후의 인플레이는 投機를 조장하고 勞賃引上要求 등 社會的 緊張을 야기하는 渦中에서 經濟成長을 沮害하였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스리랑카는 1951-54년에 이르는 기간 年平均 物價上昇率이 마이너스 1%였음에도 그간의 年平均 經濟成長率이 1%에 불과하였던 것이며 같은 스리랑카의 경우 1947년에서 1951년에 이르는 기간은 年平均 物價成長率이 7%에 이르렀음에도 그간의 年平均 經濟成長率은 5%로 集計됐던 바가 있다. 따라서 1920年代의 獨逸이나 근간의 南美型 인플레이와 같은 極端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實證적으로 인플레이나 디플레이와 經濟成長率의 높고 낮음과는 必然的인 相關關係가 없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함에도 高物價·低成長의 經濟體質보다는 高物價·高成長이 좋은 것은 물론이며 高物價·高成長型보다는 低物價·高成長型이 소망스러운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政治的·社會的 不安이 고조됐던 1980년 42.

2%의 上昇率을 나타냈던 都賣物價가 앞의〈表-1〉에서 이미 보았듯이 1983년에는 「마이너스」 0.8%의 安定勢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1980년 마이너스 5.2%의 負의 經濟成長率은 유례없는 經濟安定속에서 1983년에는 9.2%의 높은 率의 것으로 好轉됐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經濟는 安定과 成長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시에 잡으면서 80년대의 序幕을 장식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의 國際收支面에서의 經常收支 赤字 53억弗이 1983년에는 16억弗선으로 잠정추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마리 토끼를 일시에 잡았다는 대견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自負는 우리들의 主觀的인 斷定이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더한층 자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1982년 9월호의 Euromoney誌는 GNP 成長率, 消費者物價上昇率, SDR의 單位로 測定한 通貨의 強勢與否, 國際收支중 經常收支 그리고 輸出能力 등의 5個要因을 기준하여 世界各國의 經濟運用成果를 분석하여 等位를 매겨 놓았던 일이 있다. 이때 이미 前年度(1981) 對比 當該年度(1982)의 經濟運用成果를 기준하여 分析對象 81個國中 世界 3位의 等位로 判定받았던 바 있다. 또한 1983년말 美國의 Bank of Boston이 지난 10년간의 아시아 및 中南美의 開發途上國들의 經濟運用成果와 國際收支의 推移를 바탕으로 한 今後의 對外債務償還能力을 分析한 結果를 公表한 일이 있는데 멕시코 등 一部 開發途上國의 外債危機를 계기로 작성된 이 評價書 역시 韓國을 A그룹 國家로서 높은 信用度를 인정하고 있다. 즉 世界經濟秩序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國內經濟政策이 건실하게 운용되며 국제채권단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지속된다면 既存 및 새로운 導入債務의 償還에 어려움이 없을 A그룹 나라로 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韓國을 분류하고 있어 우리는 대견함을 느낄 수가 있다.

이와 같이 1980년에 40%를 上廻하여 치솟았던 物價의 고삐가 잡혀 마이너스의 數值를 나타낸 功勞는 첫째로 政治家들에게 돌려야 할 것 같다. 그간의 韓國社會의 發展過程에서 國民의 底力은 폭발적인 潛在力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된 것이 사실이고 그 潛在力이 피어날 수 있는 與件이 造成된다면 알찬 結실을 기대할 수 있는 단계에 우리는 접어들고 있다. 바로 이 방대한 潛在的 역량을 꽃피울 수 있는 與件造成이란 다음아닌 政治的·社會的 安定인 것이다. 第5共和國 출현이후 그간 政治的·社會的 安定基盤이 다져졌던 것이며 그로 하여 韓國經濟는 유례없는 安定下의 높은 經濟成長이란 結실을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안목에서 物價安定을 이룩한 가장 큰 요인을 政治的·社會的 安定으로 보는 것이며 이러한 대전제하에서 物價安定의 原因으로 다음의 세가지 要因을 가려낼 수가 있다.

첫째, 經濟政策面에서 經濟安定을 가장 우선하는 政策目標로 정하고 끈질기게 이를 추구해 온데서 찾을 수가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經濟運用面에서 總通貨供給, 換率流動, 그리고 金利 등 諸般指標를 低物價 달성을 위한 手段變數로 활용하여 왔던게 사실이다.

둘째로 國內外에 걸쳐 景氣局面이 不況期에 처해 있었다는 점과 그에 따라 原油를 비롯한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原資材價格이 하락 내지 안정세를 장기간 지속했었다는 그간의 國際經濟情勢에서 物價安定의 한 요인을 가려내게 된다.

셋째로 정부, 기업, 그리고 가계 등 우리나라의 經濟各主體들이 화합하여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정부가 經濟弘報를 강화하며 物價 오름세심리의 불식을 위해 노력하는 등 國民的 合意를 성공적으로 이룩해온데서 또한 하나의 物價安定의 原因을 규명하게 된다.

정부도 모처럼 이룩한 物價安定基盤을 계속해서 유지해갈 방침임을 천명한 바 있다. 즉 83년에서 84년에 이르는 第5次 經濟社會開發 5個年計劃의 나머지 3個年을 대상으로 한 修正案에서도 GNP 디플레이터 기준으로 年平均物價上昇率을 1.8%에 머물게 하도록 目標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달성을 위해 總通貨增加率을 年 12%내로 낮추고 財政面에서 糧穀基金 등의 赤

字要因을 축소시켜 나갈 방침을 뚜렷이 하고 있다.

3. 物價安定持續의 條件

80년을 전후하여 당시의 높은 物價上昇에 대한 原因分析을 物價當局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행한 바가 있다. 工業化에 따른 輸入依存度の 深化, 農産物의 慢性的供給不足과 流通構造의 前近代性, 持續되는 賃金上昇, 公共料金の 引上 그리고 高金利 등 供給側面의 要因과 過度한 流動性供給에 따른 超過需要의 形成 및 인플레 期待心理의 蔓延 등의 需要側 要因을 가려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간 物價安定政策을 추구해 오는 과정에서 타율적 혹은 자율적 요인들로 하여 대부분의 物價上昇要因이 해소됐던 것이며 그 결과로서 오늘과 같은 物價安定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80년대초에 국제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1980년 이후 國際原資材價格은 2년간에 걸쳐서 下降局面을 보여왔었다.

1982년 10월 이후 國際原資材價格이 반전하여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한국의 生産業體들은 生産性向上과 技術革新을 통하여 原資材價格上昇要因을 훌륭하게 흡수하여 오고 있다.

流通構造의 前近代性的의 극복이란 政策課題는 본질적으로 複雜多岐하고 長期政策的 과제이므로 短期的 成果分析對象으로는 적절한 것이 아닐 것이다.

農産物의 慢性的供給不足이라는 物價上昇要因에 관한한 지난 2년동안에 연이은 풍작과 적절한 備蓄制度의 활용으로 이제 이 요인은 해소된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또한 持續的인 賃金上昇傾向도 그간의 끈질긴 所得政策의 주효로 인하여 고개를 숙였으며 公共料金の 引上抑制의 노력과 파격적인 低金利政策의 채택 등으로 하여 原價構成面에서의 物價上昇要因이 모두 고삐가 잡힌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지난해의 總通貨의 15%선 抑制라는 過剩流動性供給의 抑制政策과 고질화된 인플레 期待心理의 불식을 위한 꾸준한 經濟弘報로 需要側面에서의 物價上昇要因도 상당히 해소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經濟安定이 經濟體質의 것으로 政策化하여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의 要件이 前提的인 것으로 요청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첫째, 더한층의 經濟安定對策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우리의 競爭國들과의 經濟指標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消費者物價가 2% 상승에 그쳤다고 하나 자유중국의 그것은 0.3%, 일본의 그것은 1.3%, 그리고 싱가포르의 그것은 1.4%의 物價安定을 이룩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賃金上昇率 3.9%에 대해 우리의 그것은 9.4%였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國際的인 對比의 안목에 설 때 우리의 經濟政策方向이 物價安定의 지속적인 추구라는 政策方向을 계속해서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1983년의 物價安定이 세계 不況에 따른 輸入原資材價格 안정을 바탕으로 이룩됐다고 보았거니와 근간 世界景氣가 回復勢를 보여 주고 있고 國際原資材價格 역시 Reuter 指數, Moody 指數, 그리고 Economist 指數 등 그 어느 것을 기준하건 1982년 10월을 전환점으로 하여 반전 上昇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輸入原資材價格 상승에 대한 對備策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對外的 物價上昇要因의 對內的 吸收를 위해 生産性向上運動과 技術革新의 要請은 더 한층 절실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그간의 物價安定에 대한 評價에 있어서 하나의 아킬레스힐(Achilles Heel)이 됐던 것이 다름아닌 不動産投機에 의한 아파트값의 상승과 집세의 앙등이었다. 이것은 또 低金利政策의 論理的 基礎를 동요시키는 요소이기도 했다. 그런만큼 經濟安定基調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른바 「한탕주의」가 통할 수 있는 投機要因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조치가 必須不可缺한 經濟要件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특히 物價가 安定勢를 다져가고 있는 지금 低金利政策에 손을 대는 것보다 각종 投機源의 봉쇄로 低金利政策의 환경조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네째, 앞으로 安定과 成長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成長의 果實이 製品價引下와 生産의 再投資로의 流入, 그리고 外債償還으로의 補填 등으로 흡수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國民의 合意의 도출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國民的 合意下에서의 자율적인 고통분담이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점을 의식하여 企業에 대하여 生産性向上과 技術의 革新을 통한 經營合理化를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것이며 국민들에 대해서 근검절약을 통해 貯蓄을 增大시킬 것과 지나친 賃金이나 農産物收買價의 引上의 自制를 유도하기 위하여 體系的인 經濟弘報를 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國民的 合意의 導出努力은 활발한 公開的 討議過程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진되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經濟安定을 위해서 우리나라 經濟의 일부 構造調整作業을 정부는 착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構造調整作業은 高度의 政治的 力量을 전제하는 것으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나 이 과제를 소홀히 하고서는 지금의 物價의 安定이 하나의 體質的인 것으로 정착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한 政策課題들이 다름아닌 不合理한 産業支援政策의 止揚, 糧穀基金 등을 비롯한 일부 既存赤字要因의 점진적인 再點檢을 통한 黑字豫算의 編成, 그리고 輸入自由化幅의 擴大 등인 것이다. 여기서 部分的으로 妥當한 原理가 全體的으로도 반드시 妥當한 것이 아니라 論理學上·構造上의 誤謬(Fallacy of Composition)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음을 상기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部分的이고 斷片的이며 그리고 局地的인 利害의 反映들이 韓國 經濟의 合理化·效率化의 요청과 어긋날 위험이 지극히 큰 까닭이다. 이러한 相剋的인 利害의

對立過程에서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고 短期的인 것이 長期的인 것을 압도할 우려가 항상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冷靜과 道德的 勇氣를 經濟政策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서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 지금의 物價安定基調가 우리 經濟의 體質的인 것으로 확고한 뿌리를 내리기 위한 또하나의 前提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經濟運用方式에 있어서의 官主導로부터 民間主導로의 철저한 移行作業이 중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 점을 소홀히 하는 경우 상당한 非能率의 代價를 지불할 우려가 있다. 즉 民間主導로의 移行의 標榜이 어느새 官主導的인 것으로 시계추 진동처럼 후퇴함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또한 政策方向의 設定은 애당초 民間主導의 철학에서 출발했던 것이 執行過程에서 官主導的인 慣行에 침몰되는 현상이 유발되지 않도록 第5共和國의 政策運用의 基本方向이 이제부터 執行段階, 實務陣容 그리고 協會 및 傘下團體 등 下部神經系統을 제어하는 양태로 뿌리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體質化된 物價安定은 經濟合理性의 관철이 보장될 때 이룩될 수가 있는 것이며 그것은 競爭原理를 기본적인 바탕으로 한 民間主導의 經濟運用方式에 의해서만이 가장 최선의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까닭이다. 이러한 뜻에서 5개 市中銀行 民營化에 뒤이은 外換銀行, 國民銀行, 中小企業銀行 등의 後續的인 民營化와 新參銀行 設立許容, 그리고 金利自律化로의 漸進的 移行 및 金融團協定體制의 탈피 등의 金融自律化作業이 중단없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可能的인 最大의 범위로 國營企業의 民營化 조치가 단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認許可幅의 縮小와 權限의 下部移讓 등이 계속해서 이뤄져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物價의 持續的인 安定을 위해 이러한 長期的인, 그리고 綜合的인 經濟的 對應策은 必須不可缺한 前提의 하나임을 강조해 두고자 하는 것이다. ♣